

피해자 10만원 배상 집단소송… 업계, 긴급점검 등 ‘비상령’

쿠팡發 ‘보안 쇼크’

네이버 소송카페 1만2600명 가입
오픈채팅방 인원 4300여명 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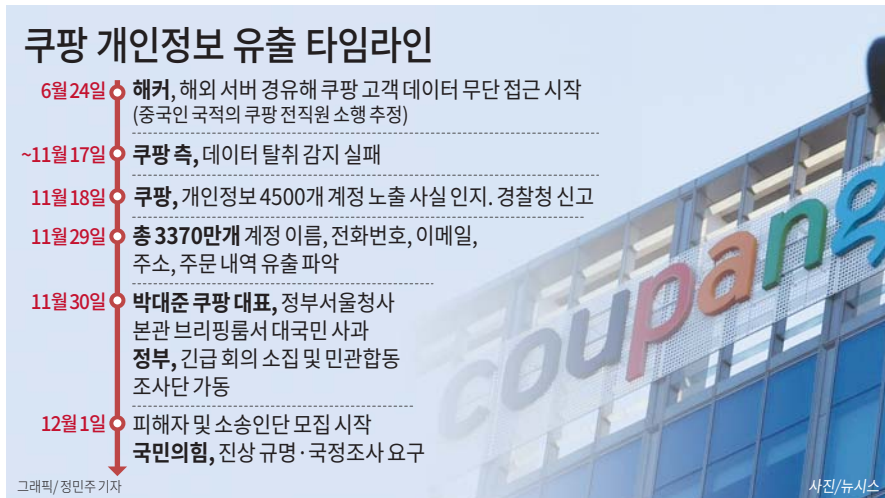
쿠팡 ‘퇴사자 권한 말소’ 쟁점될 듯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정

쿠팡 3370만 계정 유출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소비자들과 연대해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보이고 있다. 사태가 커지면서 이커머스 업계에선 보안 유출 리스크를 막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서는 등 보안 비상령이 떨어졌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 보호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정보 기술에 1조9171억원, 이 중 정보보호 부문에만 89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삼성전자, KT에 이어 국내 3위 규모다. 최근 4년간 쏟아부은 돈만 27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에도 쿠팡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 접근해 3370만 명의 정보를 빼돌리는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투자 금액이 많다고 보안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장비를 늘리는 것보다 비용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퇴사자 계정 관리 등 기본을 지키는 ‘보안 거버넌스’가 무너진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곽 교수는 “이전 KT, 롯데카드 유출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한 타겟 공격이 가능해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의 분노는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일 오후 1시 기준 네이버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단체 소송’ 카페 가입자는 1만2600명을 넘어섰으며, 오

픈채팅방 인원은 4300여명이 몰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팡을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5개월 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기록 보관이나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기에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승패가 법원의

‘안전조치 의무’ 해석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구태연 법무법인 린 AI테크 그룹장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오지 않아 단정하긴 이르다”면서도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과거 판례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해킹 사건에서 성명불상자가 수십 개의 IP를 통해 수백 회 넘게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판단했다.

또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속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경우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역시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됐다. 쿠팡이 해당 보안 조치를 취했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의 불똥은 이커머스 업계 전반으로 튀고 있다. G마켓은 주말 내 자체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했고, SSG닷컴은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의 공세 속 글로벌 합작이 늘어나면서, 고객 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안 실패는 브랜드 신뢰 손실과 소비자 이탈이라는 무형의 비용을 초래한다”며 “쿠팡의 사례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 해도 이미 늦은 ‘수습 불가’ 단계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 사태로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을 예정이다. 개정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다. 쿠팡의 지난해 연결 매출(38조2988억원)을 고려하면 이론상 1조 단위 과징금도 가능하다. 최근 SK텔레콤은 2324만명 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매출액의 1%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3370만 명 정보 유출은 역대급 참사”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열고, 정무위원회(정무위)는 3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박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소비자 보호 사전예방 최우선… 감독 총괄본부 신설”

이찬진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조직운영·인사·감독·검사 등
주요업무 소비자중심 재설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에 맞춘 조직 개편에 나선다. 원장 직속의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본부를 신설해 각 업권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현재 조직 운영, 인사, 감독 및 검사 등 주요 업무들을 금융 소비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 본부로 운영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가 금소처의 업무로만 인식된 경향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자성으로 각 권역(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을 담당하는 임

원의 책임 하에 민원, 상품, 감독, 검사 등의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 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감독원 업무의 활용 기능이 대폭 강화돼 금융 소비자가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감독 총괄 본부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소비자보호 본부의 기능을 따로 분리해 원장 직속 총괄 본부로 격상한 것이다. 총괄본부의 본부장은 부원장보가 맡고, 조직도 상 최선임 본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금소처 시스템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후 구제를 중심으로 금융 소

비자 보호가 작동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예방까지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품 판매 단계뿐만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의 과정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제조 영역의 책임과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방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해 나가고 있다”며 “업권별로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감독원도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금융회사들도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해 ‘가족들에게 권유할 수 없는 상품’은 만들지 않고, 고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 제도를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감원 조직 개편은 연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신설되는 조직도 있고, 국정 과제로 인해 새로운 미션이 부여되는 영역들도 일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개편안이 진행 중”이라며 “조직 개편안과 인사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가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 인사는 현재 인사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배터리 소재社, 유럽 공급망 주도권 잡는다

에코프로, 헝가리 양극재공장 준공
삼성SDI·SK온 등도 생산기지 운영

유럽의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고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극재·동박 등 핵심 소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 물류·품질·규제 부담을 동시에 낮추고, 유럽 배터리 생태계 내에서 주도권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1일 유럽자동차제조회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유럽연합(EU) 신차 중 배터리전기차(BEV) 비중은 16.4%로 1년 전(13.2%)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가솔린·디젤차 비중은 같은 기간 46.3%에서 36.6%로 9.7%p 감소했다. 전기차 전환이 통제로 확인되면서 공급망 규제와 맞물려 배터리 소재를 유럽 안에서 조달·가공하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에는 이미 삼성SDI·SK온·CATL 등 글로벌 이차전지 셀 기업과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이 다수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이다. 셀·완성차 공장이 속속 들어선 데 비해 소재 부문은 일부 전해질·동박 기업만 먼저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최근에는 동박 업체들이 실적 부진

을 돌파하기 위해 유럽·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에서 직접 생산하면 물류·배송비를 줄이고, 장거리 해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방지 등 까다로운 품질 관리에도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동시에 강화되는 유럽 규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맞춰 에코프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헝가리 데브레첸에 연산 5만4000톤(전기차 약 60만대 분)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상업 생산에 돌입했다. 양극재 생산(에코프로비엠), 리튬 가공(에코프로이노베이션), 공업용 산소·질소 공급(에코프로에이피)을 한 부지 내에 집적한 패키지형 공급 거점이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지난달 무역수지 97.3만弗 ‘흑자’ 기록

» 1면 ‘반도체 날고, 車 달리고…’서 계속

EU로의 수출은 일반기계와 반도체 등 품목이 호실적을 보였으나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등 주요 수출 품목 부진으로 1.9% 감소한 53억4000만달러를, 대일본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과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부진하며 6.8% 감소한 2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1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이 유가 하락으로 18.4% 감소했으나, 비에너지 수입이 6.4%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한 51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

지는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증가한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7억달러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12월에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 경제 회복의 핵심축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